

초 점 기 회

1 OECD의 科學技術政策 관련 活動과 대응과제

목 차

- I. OECD 개요
- II.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및 과학기술산업국
- III. CSTP 산하 주요 전문가그룹의 활동내용
- IV. 정책과제

徐重海

대외정책팀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I. OECD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1960년 12월 14일 체결되고, 1961년 9월 30일 효력을 발한 OECD협약에 의거하여 총 20개 회원국으로 발족하여 현재 25개의 선진경제권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통의 가치로 하고 있으며 OECD의 정책목표는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OECD의 탄생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전쟁 직후 미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을 돕기 위하여 '마셜 플랜'을 통하여 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원조를 시행하였다. 유럽의 17개국은 미국의 원조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설립하

었다. '마샬 플랜'이 종료됨과 같이하여 OEEC는 1961년 OECD로 확대·개편되었다.

OECD는 세계경제질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 EC, 일본 등은 범세계적 경제질서의 규범화에 있어서 OECD라는 중간매체를 통하여 사전논의와 규범체계를 수립하여 왔다. 특히 과거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및 규범화, 미래문제에 대한 사전발굴과 개념정립이라는 측면에서 OECD는 핵심적인 토론장이 되어왔다. 실제로 1960년대에 반덤핑,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국제규범화 했으며 '70년대에는 무역과 투자, 금융 등 서비스 자유화를 제기하였고 '80년대에는 환경, 기술, 및 경쟁정책 등의 이슈를 제기하여 UR 및 Post-UR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OECD 회원국은 1961년 20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 1964년 일본, 1969년 핀란드, 1971년 호주, 1973년 뉴질랜드 및 1994년 멕시코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회원국 이외에도 한국,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등 33개국이 각종 OECD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에 부속되어 있는 비회원경제그룹(The Council Group on Non-Member Economies)은 OECD와 비회원국 사이의 정책협조 및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OECD의 조직은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26개 위원회와 81개의 각종 작업반(또는 전문가회의)이 근간을 이루며 이들 위원회와 작업반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OECD의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은 이사회로서 이사회는 각 회

원국의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로 구성되는 상주대표이사회가 있다. 각료이사회는 매년 1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지난 1년간 있었던 산하 기구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OECD의 활동방향에 대한 지침을 확정한다.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OECD의 모든 규약은 이사회로부터 나온다.

이사회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조직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와 분야별 위원회이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1961년 9월 30일자로 구성되었으며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호주, 노르웨이,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터키 등 14개국(1994년 현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이사회를 보조하는 것이며 회원국은 14개국으로 매년 이사회에서 지정한다.

집행위원회 이외에 OECD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이다. 1961년 9월 30일 구성된 예산위원회는 각 회원국 대표 일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매년 의장을 지명하고 예산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의무는 OECD의 재정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보조하고 예산규정(Financial Regulations)에서 부과된 업무를 담당한다.

OECD는 OECD가 정부대표(inter-governmental)들의 협의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논의 과정에서 비정부기구대표들과의 자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기구로는 경제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가 있다. BIAC은 OECD가 정부대표(inter-governmental)들의 협의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논의과정에서 민간경제계의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1962년 회원국들의 민간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독립된 자문기구로 설립되었다.

BIAC은 OECD에 경제 산업부문에 대한 분야별 자문 및 세계각국정부에 경제정책수립 및 집행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IAC의 조직 및 회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조직: 연례 1회 총회, 회장 및 5명의 부위원장, 분야별 14개 위원회, 사무국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 내)
- (2) 회원: OECD 회원국의 1~2개 주요 민간경제단체들로 구성되며 현재 32개 정회원 및 1개 옵저버  
(한국의 銜經聯: 1994.3 옵저버로 참가)
- (3) 위원회: 기술 산업위원회(Technology & Industry Committee), 정보컴퓨터 통신 정책위원회(Information, Computer & Communications Policy Committee) 등 분야별 14개 위원회

BIAC과 유사한 기구로서 사회단체 특히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TUAC에 우리나라는 아직 미가입 상태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OECD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회원국의 상당수가 EU회원국들인 관계로 OECD-EU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오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매년 이사회에서 새롭게 지명하는 5개국으로 구

성된 Liaison Committee with the Council of Europe을 통하여 관계를 유지하며 구체적 활동에 있어서는 각위원회가 EU와의 공동프로젝트의 수행 또는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현재 Liaison Committee의 의장국은 벨기에이며 회원국들로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말 OECD가입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1995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와 철강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대부분의 중요한 위원회에는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표 1〉 참조).

## II.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및 과학기술산업국

### 1. 과학기술정책위원회

OECD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발전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하여 왔고 이 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기구로 1972년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STP)를 정식위원회로 설립하였다. CSTP는 OECD 산하 26개 위원회의 하나로서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회원국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과학과 기술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증진

- (2) 기초적·장기적 연구, 과학기술인력의 교육과 훈련, 회원국간의 과학기술인력의 교류, 산·학·연의 협동 및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3) 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의 교환과 회원국간의 호혜적 정책조화의 도모
- (4) 기술발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해의 증진
- (5) 회원국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의 증진
- (6) 회원국의 과학기술정보수집 및 data base의 구축
- (7) 저산업화(less-industrialized) 회원국의 과학기술문제 해결방안의 모색
- (8) 개발도상국의 잠재적 과학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방안의 모색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세계화경향을 반영하는 새로운 이슈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무역, 기술과 고용, 기술과 환경, 기술과 경쟁, 지적재산권과 기술표준문제, 거대과학의 국제협력, 생명과학과 안전성 등의 국제적 시각의 정책이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활동은 관련 위원회, 즉 산업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등과 관련이 크며 따라서 이들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CSTP는 매년 2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약 3년 반 정도의 주기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95년 9월의 총회는 제 65차 총회였으며 또한 각료급 회의도 함께 열렸다. OECD/CSTP의 정기적인 주요활동의 하

나는 각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비교·평가하는 작업이며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隔年으로 발간하는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view and Outlook로 발표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OECD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교·검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Industry Committee에서 매년 발간하는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와 함께 각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일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이러한 정기간행물 이외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데 CSTP의 주관으로 과학기술정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과제로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1) Technology and Productivity: The Challenge for Economic Policy, 1991; (2) Technology and the Economy: The Key Relationships, 1992; (3) The OECD Jobs Study: Evidence and Explanations, 1994 등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로는 Luc Soete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이 있다. 이 연구과제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대량 실업에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이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종 보고서는 1996년 6월 발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9월 12일자로 CSTP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동년 10월의 제 63차 총회를 기점으로 과학기술처와 STEPI 등 연구소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ECD 정회원가입과 관련한 과학기술정책 관

런 OECD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권고안(Recommendation)과 한개의 선언(Declaration)이 있다. (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Safety Considerations for Applications of Recombinant DNA Organisms in Industry,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C(86)82F).

(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 General Framework of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C(88)60F).

(3) Declaration on Future Polic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우리나라는 1994년 9월 OECD/CSTP 정회원 가입시 이들 규약을 수용할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CSTP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CSTP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OECD/CSTP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Consulting사업의 형식으로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조사사업(Country Re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조사사업을 위하여 '95년 중 OECD는 두 차례의 조사단을 파견한 바가 있으며 오는 12월 서울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보고서에 관한 최종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2. 과학기술산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DSTI)

OECD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OECD 상설조직인 해당 사무국의 조정과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 즉, 위원회(및 산하 전문가회의)는 비상설기구로 연중 2~3회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회의형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관련된 회의준비, 진행지원, 결과정리 등의 작업은 사무국의 상근 staff들이 수행한다. 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는 과학기술산업국(DSTI)이 이를 관장하며 DSTI에는 과학기술위원회뿐 아니라 산업위원회(Industry Committee) 및 정보통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가 구성되어 있다.<sup>1)</sup>

DSTI는 2명의 부국장 책임하에 각각 과학기술산업정책(STI Policy) Branch와 분야별 이슈(Sectoral Issues) Branch로 나뉘어지며 산하에 9개의 Division을 두고 있다(〈그림 3〉 참조). 현재 DSTI의 담당국장(Director)은 일본 통산성의 Mr. Neju, 부국장(Deputy Director)은 미국출신의 Mr. Osborne이 맡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럽국적의 staff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들어 미국 및 일본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 Ⅲ. CSTP 산하 주요 전문가그룹의 활동내용

CSTP 산하에는 5개의 작업반(전문가 그룹)이 있다. 이들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과학기술지표작업반(Group of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NESTI)

- 설립년도: 1962년 9월
- 주요활동내용: NESTI는 과학기술활동조사와 과학기술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그룹으로 현재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R&D투입활동에 대한 조사와 관련 지표(input indicator)의 개발은 Frascati Manual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내지 향후의 주요 연구과제는 현재까지 경시되었던 R&D성과와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활동방법론과 관련지표의 개발과 조사의 범위를 비제조업 분야로 확산하는데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작업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혁신/산출조사(Innovation/Output Survey)의 개선 - NESTI Group에서 작성한 OSLO Manual을 토대로 OECD 각국이 수행한 Innovation Survey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감안한 개선방안 논의
- (2) Services Innovation -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정보기술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에 제조업 중심으로 수행되어온 조사활동을 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
- (3) Nowcasting - 과학기술 관련 통계자료의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와 현시점간에는 2~3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나 통계 지표의 현시점 자료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시점자료를 정확히 Projection하기 위한 방법론 등의 개발
- (4) Human Resources in S&T(HRST) -

기존의 R&D Survey는 주로 연구개발인력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기술혁신의 총체적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다양한 관련인력의 수급예측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포괄적인 과학기술인력조사 방법론을 논의

## 2. 생명공학작업반(Working Group on Biotechnology)

- 설립년도: 1994년 3월
- 주요활동내용: 생명공학작업반은 1983년 6월 설립된 Group of National Experts on Safety in Biotechnology를 확대·개편하여 설립되었다. 이 작업반은 생명과학분야에 있어 안전성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회의이다. 또한 이를 위해 각국간에 정보의 교환, data base의 구축, 평가방법론의 개발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 작업반의 활동내용은 환경정책위원회, 공업위원회 및 농업위원회 등과 밀접히 관계가 있어 이들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3. 과학시스템작업반(Group On the Science System: GSS)

- 설립년도: 1985년 9월
- 주요활동내용: 원래 이 그룹의 명칭은 과학 및 대학연구그룹(SUR: Scientific and University Research)이었으나 1993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논의의 대상과 범위

를 대학과 연구기관에 한정하기보다 과학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총체적 시스템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GSS는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가 중요한 주제이며 따라서 과학기술교육분야(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전문가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GSS의 주된 관심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Science System의 조직과 동적인 변화
- (2) 인적자원 관리와 교육,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 (3) 과학기술인력의 국제적인 이동과 교류
- (4)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작용
- (5) 고급인력양성과 기초연구를 위한 재원확보 문제
- (6) 과학기술인력 수급예측

#### 4. 거대과학포럼 (Megascience Forum: MSF)

- 설립년도: 1992년 6월
- 주요활동내용: MSF는 현재 및 미래의 거대과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조기/공개 논의를 도모하고 이 분야의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거대과학프로젝트는 "막대한 인적·재정적 자원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3개국 또는 그 이상 국가간의 협력이 바람직한 프로젝트"로 정의되며 현재 다음의 기술분야가 OECD의 MSF에서 거대과학분야로 논의되고 있다(astronomy, deep earth drilling, global change research, oceanography, neutron beams and synchrotron radiation sources, and particle physics). 핵

융합 및 우주정거장의 거대과학적 측면은 MSF 내에서 고려되기는 했지만 정식논의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고 있으며 생명과학분야는 생명과학작업반(Working Party on Biotechnology)에서 다루고 있다. MSF의 운영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며 예산은 Part II 형태로 이루어진다.<sup>2)</sup> MSF의 주요 논의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의사결정과정: "Top-down"방식과 "Bottom-up"방식의 조화문제;
- (2) 안정적 예산확보의 문제;
- (3)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문제;
- (4) 실험설비와 실험결과(data)의 공유문제;
- (5) 프로젝트의 경제성평가문제(cost/benefit analysis).

#### 5. 기술혁신정책작업반(Working Group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Policy: TIP)

- 설립년도: 1993년 3월
- 주요활동내용: TIP은 기술혁신연구와 국제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해 '92년의 CSTP각료급회의의 결과로 설립된 전문가회의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요한 그룹이다. 특히 기술-경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와 과학기술의 세계화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정책이슈들이 TIP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TIP의 중요한 논의주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국제기술협력증진을 위한 사례연구와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원칙제정: 지적재산권 및 기술표준, 정부보조금 및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 참여 등

(2) 국가혁신체제(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NSI) 비교연구: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은 국가의 과학 및 교육제도, 노동시장, 금융제도, 규제제도 등에 밀접히 관련됨으로써 기술혁신은 systems-oriented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TIP에서는 각국의 기술혁신시스템의 비교연구가 진행 중이다.

(3) 기술, 생산성 및 고용창출: 디트로이트 G-7 정상회담의 요청으로 진행 중인 연구 과제로 기술-고용의 상관관계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특히 신기술의 고용효과, 연구개발투자가 기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기술확산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산업 및 기업수준의 연구가 진행 중임

(4) 기술혁신정책의 모범사례 비교연구(Best Practices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각국의 기술혁신정책 비교 연구를 통해 정책적 수렴(convergence)을 모색

(5) 지적재산권 및 기술표준

(6)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및 체제이론(systems theory)적 접근: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 기초한 신성장이론은 정부가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이러한 지식기반이 외부성(externalities)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성장이론으로서 연구개발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기술확산에 대한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system-theoretic 접근법이 대두되고 있으며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확산력(distribution power)에 관한 이론적, 정량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7) 기타(NESTI와의 공동연구): 과학기술지표 개발, R&D와 혁신을 촉진하는 재정정책수단 연구 등.

#### IV. 정책과제

OECD내 CSTP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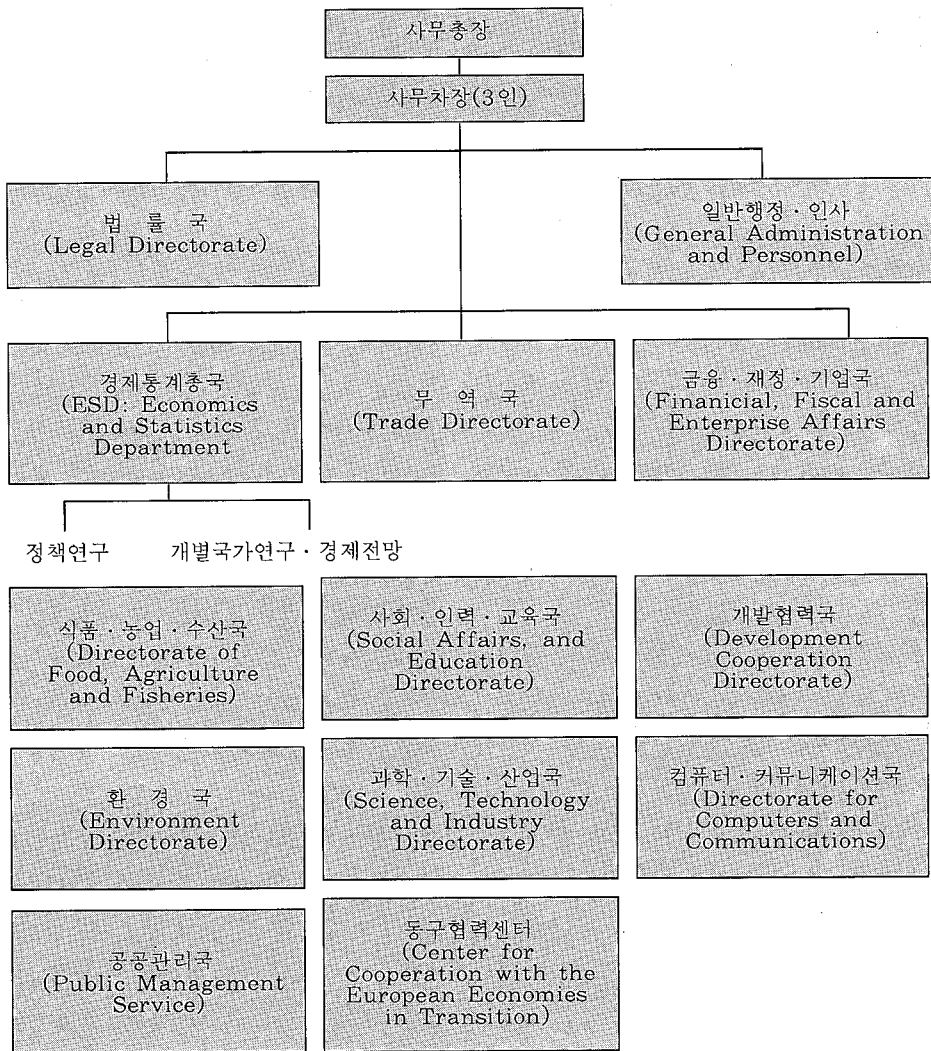
(1)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동향 파악: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학기술정책 현안 과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OECD 회원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2) 앞으로 당면할 과제의 사전적 발굴 및 대비: 경제발전단계로 보아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할 과제들을 현재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수년내 우리의 당면과제로 등장할 것임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의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3) 과학기술협력 과제발굴 및 추진: 과학기술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주요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OECD/CSTP는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국제기술규범의 동향파악과 논의과정참여: OECD는 국제규범제정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기술규범과 관련하여 논의의 방향과 주제를 미리 파악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ECD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 OECD전문가의 양성: OECD활동은 정책협약의 연구논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회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와

연구계/학계의 공동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96년 정회원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활동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OECD전문가는 정부, 연구소, 대학 모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OECD 가입을 준비하고 가입 이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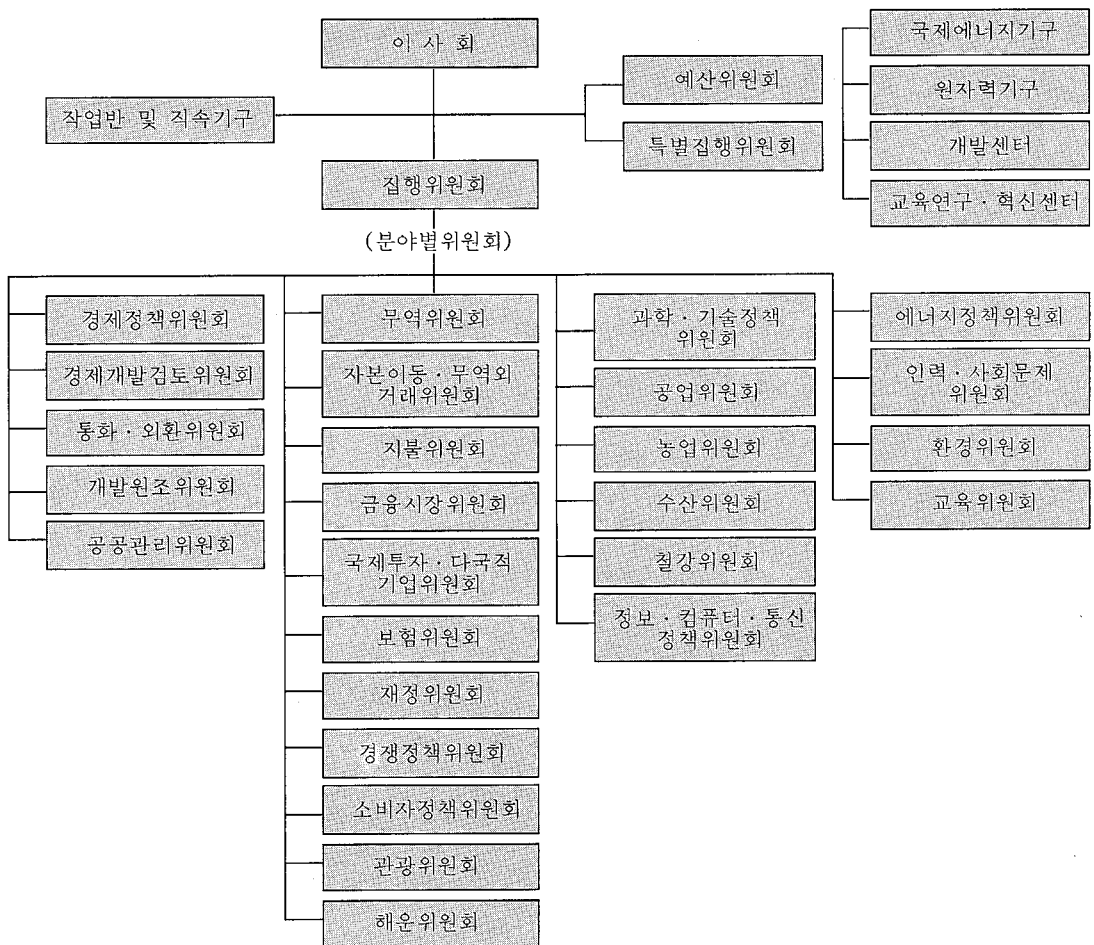


〈그림 1〉 OECD 사무국 조직현황

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는 이미 CSTP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고 분야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 특히 이공계의 기술외교전문가의 양성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OECD/CSTP라는 협의체를 통해 각분야별, 연구기관별 공동연구나 인력 교류의 기회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이공계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문가양성제도와 활동지원금금이 마련되어 참여전문가의 대표성 부여, 활동경비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그룹)를 지정하여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활동조직의 체계화: 국제기구에의 참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



〈그림 2〉 OECD 위원회 구성현황

다. 특히 OECD활동은 연간 1~2회의 '行事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회의가 연속성을 토대로 거의 매월 개최되므로 세심한 참여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활동방향을 지속적으로 follow-up하고, 논의결과 및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하며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조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고 STEPI 및 관련 연구소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기별 「국제과학기술협력 정책포럼」의 상설화를 건의하고자 한다. 특히 부문별/부처간 공조체제의 유지를 위해 유기적 정책협의 및 정보교환, 회의공동참여 등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3) OECD의 기준에 맞는 system 및 standards 등의 개편작업: OECD활동은 회의 참석뿐 아니라 각종 연구사업이나 통계수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OECD의 각종 연구나 사업은 원칙적으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원국들과 국제적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한 제도와 기준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4) 과학기술부문 상주대표의 파견: 현재 OECD에 과학기술분야(CSTP)의 상주대표가 없는 상황이다. 상주대표의 필요성은 신속한 정보획득 및 공급, 본국과 사무국 및 CSTP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장기적으로는 OECD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표 1〉 우리나라의 OECD 참여현황(95. 9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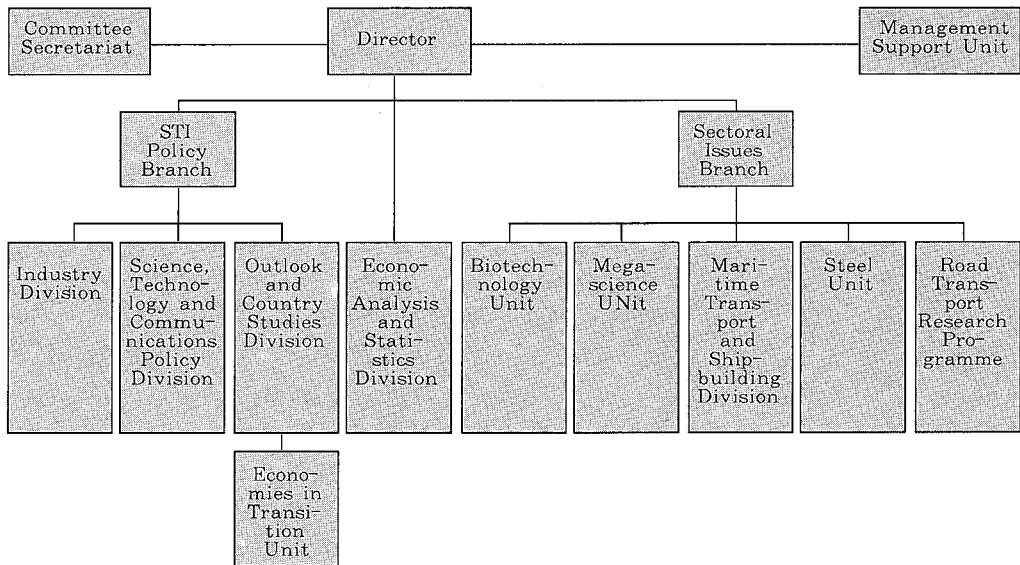
구 분		OECD 산하위원회 및 부속기관
정회원	기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직속 조선작업부('90.10)</li> <li>△ 개발센터('92. 4)</li> <li>△ 원자력기구('93. 5)</li> <li>○ 철강위원회('93. 9)</li> <li>△ 원자력기구 데이터 뱅크('94. 5)</li> <li>○ 과학기술정책위원회('94. 9)</li> </ul>
옵저버	참가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위원회('92. 7)</li> <li>○ 공업위원회('93. 6)</li> <li>△ 공업위원회 산하 4개 작업반('95. 3)</li> <li>○ 경쟁법규, 정책위원회('93. 7)</li> <li>○ 환경위원회('93. 7)</li> <li>○ 교육위원회('93.10)</li> <li>△ 교육연구혁신센터('93.10)</li> <li>○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래위원회('93.10)</li> <li>○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94. 1)</li> <li>○ 경제발전검토위원회('92.10)</li> <li>○ 관광위원회('94. 6)</li> <li>○ 해운위원회('94. 6)</li> <li>△ 경제정책위원회 산하 단기 경제전망작업반('94. 6)</li> <li>○ 재정위원회('94. 7)</li> <li>○ 고용, 노동, 사회문제위원회('94. 9)</li> <li>○ 소비자정책위원회('94.10)</li> </ul>

구 분		OECD 산하위원회 및 부속기관
읍저버	참가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위원회('94.10)</li> <li>○ 정보, 컴퓨터, 통신위원회('94.11)</li> <li>○ 금융시장위원회('94.11)</li> <li>○ 공공관리위원회('94.12)</li> <li>○ 농업위원회('94.12)</li> </ul>
	미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정책위원회</li> <li>○ 통화 외환위원회</li> <li>○ 개발원조위원회</li> <li>○ 지불위원회</li> <li>○ 에너지정책위원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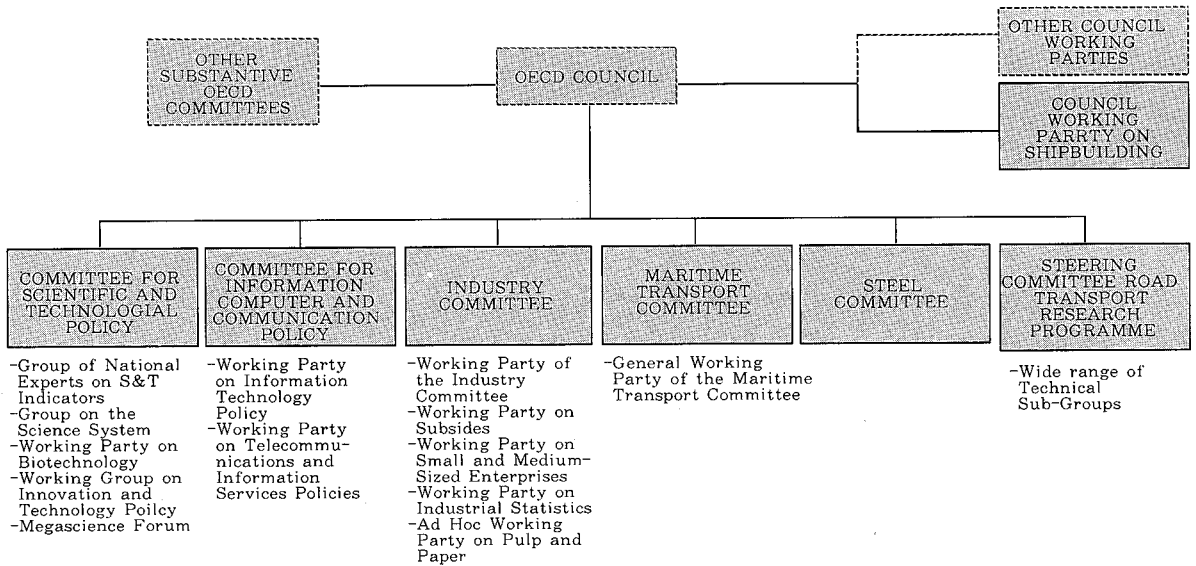
주) ○ 위원회 △ 반독립적 부속기관, 작업반

□ 전체위원회 (26개)
 

- 참가위원회: 정회원 2, 읍저버 19
- 참가신청 중 및 미참가위원회 5



〈그림 3〉 과학기술산업국(DSTI)조직



〈그림 4〉 DSTI 관련 위원회 및 작업반

하겠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회의에 참여하는 국내의 정부대표나 전문가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상주대표의 파견이 필요하다.

**【주】**

1) 현재 산업위원회는 통상산업부가 정보통신정책위원회에는 정보통신부가 각각 읍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2) OECD 사업은 회원국들의 의무적인 분담금으로 집행되는 Part I (정규사업)과 자발적인 참여국들의 분담금으로 수행되는 Part II (특수사업)으로 구성된다.